

▶ 최순실 국정특위, 제3·4차 청문회·현장조사

세월호 7시간 · 국정농단 의혹 파해친다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는 14일부터 사흘간 제3·4차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오는 14일에는 3차 청문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은 모두 16명이다.

국조특위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여욱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와 신보라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교과, 김원호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병석 연대세브란스병원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치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고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도 국회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태를 밝힐 수 있는 윤전주·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보고 상황 조사

15일 문건 유출·특혜 입학·재단 설립 등 조사

16일 대통령 경호실·차움의원,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오는 15일 4차 청문회에서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진상과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파헤친다.

이날 증인으로는 모두 30명이 채택됐다. 특히 최순실의 전 남편 정운희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당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인물이다.

국조특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정수봉 대검 정보기획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들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유라의 대입 특혜를 규명하기 위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윤우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의학과 재학생 2명,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국조특위는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대통령 경호실과 차움의

원, 김영재의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정승주 미용사와 박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구순성 경찰관이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1·2차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을 3·4차 청문회에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최순실은 지난 5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와 재판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도 불응했다. 이번에도 최순실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특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고의적으로 자택을 비우며 스스로를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고,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증인 출석을 적극 피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7일 2차 청문회 도중 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뉴스

최인정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사진)이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시·사매거진2580, 연합매일신문, 대한뉴스가 주관한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인정 의원은 도내 각종 복지 및 환경, 교육 분야를 총망라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이어졌다.

이날 수상자는 최 의원을 비롯한 주승용, 이용호 등 국회의원 12명과 전국 광역시·도의원 11명, 전국 시·군의원 9명 등이 주인공이 됐다.

그동안 최인정 의원은 제10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 지방의회 최우수 친환경 의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냈다.

최인정 의원은 "전북도의회원으로서의 책무는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도민 모두의 행복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전북도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재홍 기자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도 논의 중"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 청문회 출석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해 "만약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치소에 가서 청문을 하는 일정도 깊이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앞으로 최순실 씨를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조특위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이번 19일 5차 청문회에 최순실을 비롯한 불출석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소환할 것"이라며 "그 때 또 불출석하면 형사법적으로 국회모욕죄에 기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순실은 지난 5일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7일 제2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뉴스



새누리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당 김도연(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관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박계 "이정현·최경환 등 '친박 8적' 당 나가라"

서청원 조원진 이장우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포함... "정진석, 당 균형추 역할" 제의

새누리당 비박계가 12일 이정현 대표를 비롯 친박계 좌장 최경환, 만형 서청원 의원을 '친박 8적'으로 규정하며 당을 나가라고 주장했다.

비박계 모임 비상사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어제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오늘 이 분들에게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인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또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란다"고 친박 8적 명단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때 다시한번 새누리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새누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8명이 소속히 당을 떠나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탈당을 촉구했다.

비박계는 이날 친박계 지도부 9인을 '친박 8적'에 포함시키면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당에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고 친박 지도부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의 될 '여야정 협의체' 여당 측 대표와 관련, "여야간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친박 지도부와는 절대 얘기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 원내대표는 중간적인 입장,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으로서는 정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하는 여러가지 역할을 계속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전날 친박계가 대규모 회동을 갖고 비박계에 맞서는 '혁신과 통합연합'을 출범키로 결의한 데 대해 "친박 세력의 모임은 사실상 보수의 재건을 반대하는 수구세력들이 모여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방편으로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과 통합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당을 국민으로부터, 당원들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보수의 재건을 이뤄낼 수 있도록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여야3당 "여야정 협의체 가동... 개헌특위도 설치" 임시국회 12일~31일

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기로 합의했다. 또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합의했다.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

한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여야는 또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임시국회 회의는 12일부터 31일로 정했고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20~21일 양일간 진행된다. 20일은 경제분야, 21일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모두 참석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황 대행을 출석시키지 말고 3당 원내대표와 황 대행간 별도 회동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황 대행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과도적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국회와 토론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황 대행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결국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뉴스

정세균 "박 대통령 탄핵, 결국 정치는 민심"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결국 정치는 민심과 뿔뿔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 됐던) 2004년엔 탄핵을 반대하는 민심,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심이 정반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적인 의사결정을 제가 담당하게 돼 참으로 무거운 마음도 들었고 정말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의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 17대대사들 20여명과 오래 전 잡힌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며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를 얘기하며 우리 정치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꼬집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했다.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현지 활동이 부끄럽고, 밖에 나가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아마 제가 직접 필드에서 뛰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정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협의체가 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는 이름에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협치를 제대로 실천하자'는 취지의 노력"이라고 야당 제안을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겸양의 지덕을 발휘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각 정당들이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국민을 배려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주권자 국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회나 정당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뉴스

민주당 '특검, '몸통' 박 대통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데 대해 "특검의 결단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특검은 삼성·SK·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과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담겨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병우 구속수사, 김기춘 소환조사,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또한 특검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특검은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밝혀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죄상과 책임을 낱알이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세월호 7시간 당시의 대통령 행적을 밝혀내는 것도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7시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삼켰던 세월호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탄핵의 공은 현재에 넘어갔고, 칼자루는 특검에 쥐어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와 특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즉생 생생사의 각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